

목 차

📁	모빌리티 동향	15
해외	- 美 바이든 정부, 8월 1일부로 중국산 관세폭탄…전기차 25%→100%	15
	- 중국 자동차산업, 막대한 보조금 업고 ‘기술 속도전’	16
	- 테슬라 로보택시 가속페달…GM, 자율주행차 운행 재개	17
	- "광고판 차량 사진 보고 급정거"…中, 잇따르는 황당 전기차 사고	18
	- 우주여행도 보험 시대…일본 대형보험사가 선점	19
정책	-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선 요구한 EU	20
	- K-UAM, 핵심 기술개발(R&D) 나선다	21
	-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 6월부터 본격 시작	22
	- 경찰청,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	23
	- 인천시, 충전시설 확충…'친환경 모빌리티 선도도시' 구축	24
기업	- 한국수력원자력, 고리1호기 원전 해체에 로봇 투입	25
	- LG U+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회사설립 승인	26

美 바이든 정부, 8월 1일부로 중국산 관세폭탄...전기차 25%→100%

- 미국 무역대표부(USTR), 22일(현지시각)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올해 8월 1일부로 현재의 4배인 100%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
 - 주요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보도
 - 이는 '통상법 301조(슈퍼 301조)'에 따른 조치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실시하였던 관세 정책을 이어받아 더 강화시킨 것

<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(출처: AP연합뉴스 자료사진) >



-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50%로 오르며, 중국 이외로부터의 대체 조달 루트의 확보가 어려운 흑연이나 영구 자석은 유예 기간을 길게 잡아 2026년 1월 1일부터 25%로 인상할 예정
- 세율 인상 대상이 된 제품이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재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도입
 - 미국 내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, 대상이 되는 기계를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재관세 없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인정할 계획
 -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요한 기계 등은 이전부터 미국 내 사업자로부터 예외 취급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, 미국 무역대표부는 해당 품목을 제재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
-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에 관보에서 공표한 안에 대해 다음달 28일까지 산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

출처 : 뉴시스, 美 바이든 정부, 8월1일부로 중국산 관세폭탄...전기차25%→100% (2024.5.23.)

중국 자동차산업, 막대한 보조금 업고 '기술 속도전'

■ 중국 자동차산업, 자동차회사와 IT 업계가 손잡고 보조금으로 급성장 중

- 화웨이는 중국 완성차 업체 네 곳과 제휴하였으며, 올해 말까지 화웨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누적대수가 5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고도 전망
-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지리자동차와 협업 중이며,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는 상하이차와 전기차를 합작한 사례가 있음
- 중국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은 샤오핑과 함께 전기차 브랜드 '모나(MONA)'를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며, 사실상 IT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변모 중

〈 주요국 국가전략기술 수준 (출처: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) 〉

주요국 국가전략기술 수준 비교 단위: %
미국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다른 국가의 수준.

	한국	중국	일본
첨단모빌리티	84.2	86.3	85.8
인공지능	78.8	90.9	76.4
반도체·디스플레이	89.0	84.4	86.2
첨단로봇·제조	82.0	82.9	89.3

■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면서 자율주행 사업을 독려한 것은 자동차시장의 급성장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됨

- 중국은 일정 규정만 준수하면 자율주행 도중 발생한 데이터를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, 한국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율주행 테스트의 범위와 장소를 엄격히 제한 중

■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 생산 능력과 기술을 급속도로 끌어올린 상황

- 중국은 현재 연간 약 4,000만 대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판매되는 자동차는 약 2,200만 대 수준으로, 과잉 생산이 분명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며 과잉 생산 체제를 유지 중
-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(CSIS)는 중국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등에 보조금으로 약 1,730억 달러(약 239조 원)를 지출했다고 분석

출처 : 동아일보, 中전기차, 239조원 보조금 업고 '기술 속도전'... 韓 상륙 비상 (2024.5.2.)

테슬라 로보택시 가속페달...GM, 자율주행차 운행 재개

- 미국 GM(제너럴모터스),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가 자율주행 차량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
 - 지난해 가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보행자가 다친 사고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셈
 -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로보택시를 8월 8일 공개한다고 예고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뜨거운 상황

< 크루즈 자율주행 차량 (출처: AP연합뉴스) >



- 13일(현지시간) 미국 CNN에 따르면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이번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다시 운영을 시작할 예정
 - 무인(無人)으로 움직였던 이전 차량과는 다르게 개조된 쉐보레 볼트 전기차 운전대에는 '안전 운전자'가 앉을 예정이며, 차량은 거의 대부분 자율주행이 작동되지만 비상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됨
 - 이는 지난해 10월 사람이 타지 않은 크루즈 로보택시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고 이후 6m가량 끌고 가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킨 것에 따른 후속 조치
-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
 -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의 로보택시가 최근 2건의 교통사고를 내자 미국 교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미국에서는 크고 작은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음

출처 : 한국경제, 테슬라 로보택시 가속페달...GM, 자율주행차운행 재개 (2024.5.14.)

"광고판 차량 사진 보고 급정거"...中, 잇따르는 황당 전기차 사고

- 중국에서 광고판의 차량을 실제 차량으로 오인해 운행 도중 차량이 멈춰서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전 세계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들은 최근 잇따른 사고로 인해 안전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임
 - 13일(현지시간)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 상양시에서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운전하다가 차량이 주행 중에 광고판의 픽업트럭 사진을 감지한 후 갑자기 급정거해 뒷차가 추돌한 사고가 발생
 - 사고 후 교통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결정

< 샤오미 전기차 SU7 (출처: 샤오미) >



- 출시 직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 역시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
 - 지난 6일 푸젠성 샤먼시에서 고객에게 처음 인도된 샤오미 SU7은 주행 39km 만에 시스템 오작동으로 도로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
 - 차량 주인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영상을 올리면서 “차량을 인도받고 센터를 출발한 후 39km 만에 고장 났다”면서 견인 트럭이 오기까지 갓길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언급

출처 : 서울경제 , "광고판 차량 사진 보고 급정거"...中, 잇따르는 황당 전기차 사고 (2024.5.14.)

우주여행도 보험 시대...일본 대형보험사가 선점

- 우주산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일본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
 - 세계 최초로 달 표면 탐사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상하는 '달 보험'을 출시하는가 하면, 우주공간에서 지구로 귀환한 후 발생한 신체문제를 보상하는 우주여행보험 개발도 진행 중
 - 반면, 국내 '우주보험'은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에 한정돼 있어 보험산업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국내 보험사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
- 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, 최근 일본 정부가 우주산업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우주산업이 일본 손해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
 -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향후 20년을 대비해 우주산업 기본방침인 '우주 기본 계획'을 발표했는데, 2020년 4조 엔 규모의 우주산업 규모를 2030년대 초까지 8조 엔(약 71조 원) 수준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포함

< 달 및 지구 자료사진 >



- 강윤지 보험연구원 연구원, “최근 민간 주도의 위성 인터넷, 우주 빅데이터, 우주여행, 행성 탐색 등의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”이라며
 - “보험산업은 수익원 확대를 위해 위성 데이터 중심의 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”고 언급

출처 : 매일경제, 우주여행도 보험 시대...일본 대형보험사가 선점 (2024.5.6.)

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선 요구한 EU

- 유럽연합(EU)이 한국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정책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이 현존하는 상황에 무리한 요구라는 시각도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
 -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·유럽연합(EU) 자유무역협정(FTA)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회의에 앞서 EU는 국내 전기차 구매보조금 관련 기준 개선을 의제로 제시
 - EU 측은 먼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매년 바뀌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, 한국 정부는 전기차 판매가격과 충전 인프라 확충,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등의 기준을 세우고 보조금을 책정하는데 EU 국가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

< 최근 개최된 EV237 버스 사진(출처: 뉴스1) >



- 국내 자동차업계, 수입차 브랜드도 전기차 판매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
 -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,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수입 전기차 판매 업체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뜻
- 한국전기차협회장을 겸하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, "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달라는 EU의 요구가 있었다"며
 - "잘못된 요구는 아니어서 정부의 정책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유럽의 탄소국경세,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주요 지역에서 강력한 규제를 펼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국내 보조금 방향도 국내 산업을 우선하는 게 당연하다"고 강조

출처 : MoneyS.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선 요구한 EU (2024.5.21.)

K-UAM, 핵심 기술개발(R&D) 나선다

- 국토교통부, 도심항공교통(UAM)의 본격 상용화 시점인 성장기('30년~)를 대비하여 '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' 사업을 착수

-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현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('23.4)된 바 있으며,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('23.8)한 첫 번째 사례

< 정부의 UAM 추진 로드맵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·적용 방안(안) >



- 본 사업에는 총 1,007억 원(국비 803억 원)이 투입될 예정이며 ① 항행·교통관리기술, ② 버티포트 운용·지원기술, ③ 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분야 총 7개 연구개발과제로 관련 산·학·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
- 국토부와 기상청은 다부처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긴밀한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국토부 산하 R&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 'UAM 국가전략기술 사업단'을 구성하고 김민기 수석연구원을 사업단장으로 선정

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, K-UAM, 핵심 기술개발(R&D) 나선다 (2024.5.14.)

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 6월부터 본격 시작

-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할 계획
 -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, 테스트베드(공동주택)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던 상황
 - 이에 국토부, LH,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,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됨

〈 공동주택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주택 실험동 〉



-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·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할 예정
 -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(맵핑), 로봇-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, 실내 수평·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됨
 - 또한,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를 파악하고,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
-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, “인공지능(AI), 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로봇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속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밝힘

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,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 6월부터 본격 시작 (2024.5.21.)

경찰청,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

- 경찰청(청장 윤희근),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함께 4월 30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‘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’를 주제로 산업계와 소통하는 간담회 개최
 -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,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
 - 이번 간담회에는 실제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, 카카오모빌리티, 에스유엠(SUM)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

〈 경찰청 전경 〉



-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교육 과정 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
 - 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 안전한 자율주행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
- 경찰청 조우종 교통안전과장, “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며 “교육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하겠다”라고 언급
 -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조성환 회장, “자율주행산업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되기를 희망한다”며, “교육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이라는 대중들의 인식이 향상되어 자율주행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발언

출처 : 경찰청 보도자료, ‘경찰청-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’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 (2024.4.30.)

인천시, 충전시설 확충... '친환경 모빌리티 선도도시' 구축

- 인천광역시,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'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(인프라) 확충' 방안을 발표
 - 인천시는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환경부 주관 '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' 공모에 참여할 예정
 - 공모액은 100억 원이며, 선정 시 국비 50억 원, 민간 사업자 50억 원 부담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됨
 -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후보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설치 순위를 조정할 계획이며, 선정 후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올해까지 충전시설 설치 및 검수를 준비할 예정
 - 시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(인프라) 확충을 위해 화물차 및 버스 차고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고,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개방형 공용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

〈 인천시 전기차 충전시설 〉



- 또한, 인천시는 수소 충전 기반시설(인프라) 확충을 위해 충전소를 2025년까지 18개소, 2030년까지는 인천 전 지역에서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
 - 현재 인천시 구축된 수소충전소는 11개소지만, 2024년말 16개소로 증축하고, 2025년 1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
-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, "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까지 확대된다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"이라며
 - "지속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"고 밝힘

출처 : 에너지신문, 인천시, 충전시설 확충... '친환경 모빌리티 선도도시' 구축(2024.5.2.)

한국수력원자력, 고리1호기 원전 해체에 로봇 투입

- 한국수력원자력(이하 한수원), 방사선구역 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고리1호기 해체 제염작업에 최초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
 - 한수원은 앞으로 로봇을 활용해 작업자의 피폭은 최소화하고 제염작업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방침
- 한수원은 2021년부터 원자력발전소 환경에 특화된 4족형 자율보행 지상로봇과 방사선량 측정 센서를 탑재한 실내 자율비행 로봇을 개발해 왔음
 - 로봇에는 여러 개의 카메라와 방사선 센서, 3D 라이다(Lidar) 기술이 적용되었으며, 이를 통해 작업자는 직접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 없이 안전하게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고 방사선량 정보를 시각화해 직관적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 있음

< 한국수력원자력 로봇 (출처: 한국수력원자력) >



-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, “한수원이 개발한 로봇을 통해 안전한 원전 해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
 - “앞으로도 로봇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원전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산업 안전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힘

출처 : 한국경제, 한수원, 고리1호기 원전 해체에 로봇 투입 (2024.5.8.)

LG U+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회사설립 승인

- 공정거래위원회, ‘LG U+’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영위하는
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
 - LG U+,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
계열사로 두고 있으며,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
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
 -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, 택시,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
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,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음

〈 최근 5년간 전기차 보급 추이 (출처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, 단위: 대) 〉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
전체 자동차	23,677,366	24,365,979	24,911,101	25,503,078	25,949,201
전기차	101,049	134,962	231,497	389,855	543,900
전체 자동차 대비 전기차 보급 비중	0.43%	0.55%	0.93%	1.53%	2.10%
전기차 등록 전년대비 증가율	-	1.34배	1.72배	1.68배	1.40배

- 공정위는 LG U+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, 주차 등 모빌리티
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
검토하였고, 결론적으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
 - (낮은 시장 점유율) 신설될 합작회사는 LG U+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,
2023년 7월 기준 LG U+의 시장점유율이 1.1%에 불과하여 시장 점유율이 낮음
 - (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) LG 및 카카오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
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
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봄

출처 :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, LG U+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회사설립 승인 (2024.4.29.)